## 3 여성가족실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저출생담당관 : 최현정☎2133-5005 저출생정책팀장 : 최인성☎5007 담당 : 신태철☎5009

## □ 총 1건 건의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
	<ul> <li>□ 현황 및 문제점</li> <li>○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에 적극 대응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 시,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소득기준 부여 및 지원기준 강화로 효과성 저해</li> <li>○ 협의 담당자에 따라 협의내용·협의기간 상이하여 행정의 연속성 확보 곤란</li> </ul>
	□ <b>필요성</b> ○ <b>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저출생 대응 효과</b> 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
< 2025년 상반기 서울시 규제개선 일괄 건의('25.3.28.) 中 > (시 법무담당관→행정안전부)	<ul> <li>저출생 정책은 기존 복지정책과 다른 접근 필요</li> <li>최근의 저출생 반등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신속한 저출생 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협의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 곤란</li> </ul>
<b>저출생 정책 시회보장협의제도</b> <b>개선 건의</b> (여성가족실)	<ul> <li>협의과정에서 소득기준 신설 및 지원기준 강화, 지원방식 제한 등으로 저출생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 저하 및 효과성 감소</li> </ul>
	<ul> <li>□ 건의내용</li> <li>○ (단기) 저출생 정책 패스트트랙 심사절차 마련 및 지원기준 완화</li> <li>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・시급성을 고려하여 저출생 정책은 한시적으로 별도의 신속 심사절차 마련하여 신설・변경 협의 절차 간소화 필요</li> <li>─ 저출생 정책(특히, 중위소득 150%사업)은 한시적 소득기준 완화</li> <li>─ 전세보증금 기준 완화, 중복지원 허용, 다자녀 우대 등 두터운 지원 필요</li> </ul>
	<ul><li>○ (장기) 저출생 정책의 효과성 고려하여 소득기준 폐지</li><li>─ 장기적으로 저출생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</li></ul>